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9.2(수) 브리핑 시(11:00)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/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		
책 임 자	김연준 금융제도팀장 (2156-9680) 이병삼 제재심의국장 (3145-7800)	담 당 자	류성재 사무관 (2156-9683) 장진택 팀 장 (3145-7802)
배 포 일	'15. 9. 1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13매

제 목 :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→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 발표

- ◆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
- ◆ 과태료는 약 2배, 과징금은 약 3~5배 인상
- ◆ 과태료 부과·징수는 금감원에 위탁
- ◆ 차기 국회에 금융 관련법 개정안 제출(과태료·과징금 개선은 법 개정사항)

I.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제재제도 선진화 T/F'('15.5~6월)와 금융개혁자문단('15.8.20) 논의 등을 바탕으로
 -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('15.8.27)를 거쳐 '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'을 마련하였음
- 제2차 금융개혁회의(4.22)시 '검사·제재 개혁방안'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·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
 - 금번 추진방안은 상기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기관·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·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

II. 현 제재제도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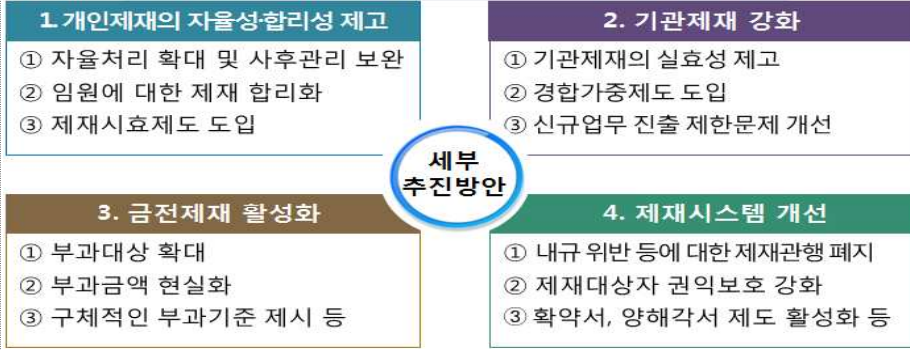
- ①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수적 행태를 유발
 - 감독당국이 직원까지 일일이 제재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키울 기회가 제한
 - * '12~'14년 제재(개인제재+기관제재) 4,303건 중 직원 제재가 약 73.8% (3,175건)
 - 제재시효제도가 없어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위험에 노출
- ② 기관제재는 주의·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효성이 부족
 - * '12~'14년 기준 기관제재 중 주의·경고 비중 : 약 89.5%
 - 동일 검사에서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합가중하지 않아 위반행위 수준에 상응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
- ③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미흡
 - 주요국 사례* 및 국내 타영역**에 비해 금융분야 제재금액이 현저히 낮아 징벌성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미흡
 - * (美 SEC) 도이치뱅크가 금융위기사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하여 \$5,500만(약 650억원) 규모의 과징금 부과('15.5월)
 - ** '14년 과징금 부과실적 (1건당 평균금액, 부과건수)

금융위	공정위	방통위
2.7억원, 70건	71.2억원, 113건	58.3억원, 34건
- ④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도 제재하고 자체시정이 가능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일일이 제재
 - 적발·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
 - * 주요 선진국은 ① MOU 등 비공식적 감독조치를 우선 활용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, ② 금융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식 제재수단을 활용

Ⅲ. 제재개혁 추진방안

< 기본 방향 >

금융기관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·책임성 제고



- ① **(개인제재)**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,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
 -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
- ② **(기관제재)**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·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
 -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
- ③ **(금전제재)**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
 -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개선
- ④ **(제재시스템)**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
 - 확약서·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

1. 개인제재의 자율성·합리성 제고

- ① 직원 잘못은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를 계속 확대
 - 자율처리대상을 ①전책→감봉 이하로 확대하고, ②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, ③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
 - 자율처리 결과 미흡시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삭제
- ② 임원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
 - ①점사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, ②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제재
- ③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(5년)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'제재시효제도'를 도입
 - * 공정거래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5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,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
 - 우선적으로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하는 한편,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 내규*에 반영하고 금감원 검사·제재시 이를 존중
 - * 직원 제재는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"요구"하는 형태이므로 각 기관 내규에 '(예)5년이 경과한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'고 반영할 경우 제재시효제도 도입효과 기대
 -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- # 최근 검사에서 자금세탁에 관련한 사실이 적발된 A은행 某 과장에 대해 종전에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(감봉 요구)하였으나, 앞으로는 A은행장에게 자율처리 통보
- # 이직을 거듭하며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계속 해온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B에 대해 위법행위 전체를 감안한 중징계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엄정성 확보
- # 최근 검사에서 7년전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C은행 某 계장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시효 도과에 따라 검사결과서에 '제재시효 완성'으로 표시하고 종결

2.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

① 금융기관의 **경영방침, 내부통제 소홀**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**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**

- 중대한 위반행위,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하는 관행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**‘단기/일부 영업정지’를 적극 활용**

* 1개월 미만의 단기로 영업 일부를 정지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기관 평판 측면의 제재효과를 거두는 방식(일본 금융청 등이 활용)

② **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‘경합가중제도’ 도입**

- 예를 들어, 기관주의(기관경고) 수준의 **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(영업정지)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하여 부과**

③ **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운 문제 개선(3년→1년으로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 단축)**

- 아울러, **기관간 합병시 제재 기록이 합산되어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***할 계획

*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도록 함

☞ 규정 변경예고 기완료, **‘15.9월중 시행 예정**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A은행은 종합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4건 적발됨

⇒ 기존에는 기관주의 조치만 가능했으나, 바뀐 제도에 따라 기관경고로 경합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제재 가능

C은행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D보험사 인수를 검토하였으나, 2년전 받은 기관경고로 인해 인수가 불가능

⇒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C은행의 보험업 진출 기회 부여

3. 금전제재 활성화

(1) 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

① 제재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**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**

- 특히 **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간 제재 형평성 제고 추진***

*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
예)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→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/ 지주은행법 금전제재 無

② 현재 자본시장법 등*에만 도입되어 있는 **영업정지 같음 과징금**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, **기관경고 같음 과징금****도 신설

* 자본시장법, 여전법, 전금법, 회계사법(4개)→은행법, 지주법, 보험업법 등에도 도입

** 기관경고는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, 기관경고 같음 과징금도 금감원에 위탁

(2)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

① **(과태료)** 현행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5백만원~5천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, **부과한도 인상을 검토**

< 기본 원칙 >

① **지주·은행·증권·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, 개인은 5천만원까지 인상하되,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**

※ 보험업법 개정안('14.9월 입법예고): 보험사: 5천만→1억원, 임직원: 2천만→5천만원

② **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,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**

③ **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과한도를 인상**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고객(약 300명)이 대출 권유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총 862회의 대출 부당권유를 한 A은행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 부과
⇒ 기관에 대한 과태료 600만원은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, 금액 상향 추진

B은행, C보험사, D카드사 임원은 동일하게 금감원 검사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데, 업권별로 과태료 상한이 은행은 1천만원, 보험사는 2천만원, 카드사는 5백만원으로 부과한도가 크게 차이남

⇒ 앞으로 동일·유사위규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제재 형평성 제고

② (과징금) 금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

-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×법정부과비율로 ①법정부과한도액*을 산출한 후, ①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②기본과징금에 가중·감경 등을 거쳐 ③최종 부과액을 결정

* 예)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→초과한 신용공여액×10%
보험계약자 등에 특별이익 제공→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×20%

-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라 기본부과율이 체감*하는 구조인데,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효과

* (2억이하)7/10→(2~20억)7/20→(20~200억)7/40→(200~2000억)7/80→(2000억 초과)7/160

① 법정 부과한도액 (위반금액 × 부과비율)	× 기본부과율	② 기본과징금	± 가중·감경 및 조정	③ 과징금 부과액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⇒ ①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

- ②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,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비율을 차등적용*(공정위·방통위와 유사한 방식)

* 예: (중대성 弱)×50%~70%, (중대)×70%~85%, (매우 중대)×85%~100%

☞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~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A보험사는 과거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 등을 통해 총 5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으나 그로 인한 과징금은 2억45백만원에 불과

* 연간 수입보험료에 부과비율(20%)을 곱한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(35~70%) 고려

⇒ 부과비율을 인상(20→50%)하고 기본부과율 폐지시(중대한 위반이므로 부과비율의 85% 적용) 과징금은 10억6천만원으로 약 4.3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

B저축은행은 여신 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 차주에 대한 법정 여신한도를 10억원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7천만원만 부과됨

* 초과 신용공여한도액에 부과비율(10%)을 곱한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(70%) 고려

⇒ 부과비율을 인상(10→30%)하고 기본부과율 폐지시(중대한 위반이므로 부과비율의 85% 적용) 과징금은 2억55백만원으로 약 3.6배 인상되어 위법행위 억제 효과 제고

③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

- 법에 따라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·과징금·벌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재분류

* ① 제재 실효성 제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시 과태료→과징금 전환
② 비범죄화 차원에서 벌금→과태료·과징금 전환(법무부 협조 필요)

④ 금전제재 부과기준 합리화

-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가중·감경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

* 예) 자체적 위반 방지노력(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)에 대한 감경폭 확대 등

4. 제재시스템 개선

- ①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·행정지도 위반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을 개선

- 행정지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*은 조속히 개정 추진

* 여신 관련 내규 위반, 금감원 검사결과 경영유의·개선사항에 대한 이행부진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검사·제재규정 개정 추진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A은행 B과장은 C기업의 갑작스런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규상 일부 절차를 누락하여 대출을 취급한 후, 결국 C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은행에 손실이 초래된 경우, B과장의 내규 위반에 대해 제재 요구

⇒ B과장의 법규상 근거없는 은행 내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함

② 확약서·양해각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개선을 유도

-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* 제재하지 않고 확약서·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 유도

* ① 행위당시 위법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 인식없이 행해진 경우
② 위법에 고의·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

< 개선시 기대효과 (가상사례) >

A저축은행은 중고자동차 대출에 대해 감정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총당금을 쌓아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었으나, 동 저축은행은 고의가 아니며 업계 관행임을 주장
⇒ 정확한 감정가액 산정 등 개선계획 담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자율개선 유도

③ 금전제재 업무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 추진

- 금융위·금감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금전제재 확대에 따른 합리적 업무 분담을 위해 금전제재 업무의 일부 위탁 추진

* 현재 개인·기관제재는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으나,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·징수

⇒ (위탁방안)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,
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
☞ 최근 3년간 금전제재의 건수 91.8%, 금액 20.3% 위탁효과 발생

- 과태료는 단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판단
- 제재대상자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
 - ① 제재심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행사 등을 한층 강화
 - ②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(예: 매분기말)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

- ④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의 각 단계별로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('15.9월중 시행 예정)

-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신속히 알려주고, 사전통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
- 제재심·금융위 등의 안건의 본인 관련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시 제재대상자에게 대등한 발언기회 보장

IV. 향후 추진계획

-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·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
-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준비하고,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

※ 과태료·과징금 부과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34개의 금융 관련법 개정을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* 중심으로 우선 개정 추진

* 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,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, 여전법, 저축은행법, 신용정보법, 전자금융법, 신용협동조합법 (이상 9개법)

붙임 :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 고 보도자료 관련 Q&A

1. 자율처리 적용대상을 전체 업권 및 전체 제재수위로 전면 확대할 수는 없는지?

- ☐ 자율처리제도는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해당 금융기관을 믿고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므로,
 -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내부통제장치가 취약하여 자율조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구축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필요
 -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유지할 필요

2. 기관제재에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?

- ☐ 현행 제도는 단일 검사에서 기관주의(기관경고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건 적발된 경우나 4건 적발된 경우가 모두 기관주의(기관경고)로 조치되어 형평에 맞지않음
- ☐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면 4건을 적발한 경우에는 기관경고(영업정지)로 한단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형평성 제고 기대

※ 임직원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를 이미 적용중

3.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'기본부과율'은 무엇이고, 왜 폐지하는지?

- ☐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은 '위반 관련금액 × 법정 부과비율'로 산정된 '법정 부과한도액'의 크기에 따라,
 - 7/10~7/160까지 곱하는 것으로써 온정적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기능 외에는 그 목적을 찾기 어려웠음
- ☐ 과징금 제도 도입 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제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부과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나,
 -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을 할인해주는 체감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, 금번 제도개전시 기본부과율을 폐지
 - 앞으로는 타 부처(공정위, 방통위)와 같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

4. 동일·유사위반에 대해 금융법에 따라 과태료·과징금·벌금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재수위도 다른 이유는?

- ☐ 각 금융관련 법의 제·개정시기가 다르고, 금융업권별 업무의 특성이 다른 면도 있어 금전제재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
- ☐ 주요 금융법의 제재유형과 수위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하여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

5.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는 무엇이고, 과태료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이유는?

□ 과태료는 ①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②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비교적 경미한 제재인 반면,

○ 과징금은 ①부당이득 환수, 징벌적 목적 등으로 부과되며, ②금융위 소관 제재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도 있는 중대 제재

구 분	과 태 료	과 징 금
부과목적	직접적 행정목적 침해가 아닌 경미한 의무위반에 부과	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, 영업정지 갈음, 징벌적 목적 등
부과대상	금융 관련법 33개법에 491개 사유	금융 관련법 9개법에 105개 사유 * 지주회사법, 은행법, 보험업법, 전자금융법, 저축은행법, 여전법, 자본시장법, 회계사법, 신정법
부과한도	5백만원~5천만원	위반 관련 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(예: 초과신용공여액의 40% 이하)
불복절차	질서위반행위규제법, 비송사건절차법	행정소송법
최근 3년간 부과실적	총 2,416건, 약 154.5억원 수준 (건당 평균 6.3백만원)	총 217건, 약 607.0억원 수준 (건당 평균 2.8억원)

□ 현재 과태료·과징금은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·징수하고 있는 바,

○ 금융위/원 간 협력 강화 및 제재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과태료 업무의 위탁을 추진함